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3면	내일 강릉시민축구단 홈개막전 '힘찬 출발'	1
江原日報	03면	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 공모 무려 605건 접수 뜨거운 관심	2
MBC 강원영동	온라인	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방침 · 슬로건 605건 접수	2
연합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새 슬로건.의정 방침 공모 605건 접수	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자도 특례 반영 지원위 준비 불만 폭발	4
강원도민일보	03면	정부, 타 시 · 도 형평성 고려 '강원특자도 특례' 가시발길	5
강원도민일보	03면	"특별법안 균형발전 역행 독소조항 삭제해야"	5
강원도민일보	04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	6
강원도민일보	02면	정부 문화격차 해소 전략에 강원권 국립문화시설 '1곳 뿐'	6
강원도민일보	04면	시도교육감협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 개정 촉구	7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교육청 슬림화 '사업일몰제' 도입	7
江原日報	01면	도내 공중보건의 절반 제대 ... 지역 보건소 · 응급실 파행 위...	8
江原日報	04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준비 박차	8
강원도민일보	01면	레고랜드 오늘 재개장...의문 · 우려는 여전	9
강원도민일보	11면	레고랜드 연계 관광산업 궤도 수정 불가피	10
KBS 춘천	온라인	레고랜드 활성화 박차...과제도 여전	11
G1방송	온라인	레고랜드 재개장.. '기대반 우려반'	1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정부에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요청	13
KBS 춘천	온라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강원도 ‘비상’	14
G1방송	온라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포함 '사할'	15
江原日報	02면	오색케이블카 후속 행정절차 속도낸다	16
강원도민일보	18면	고성서 '연어의 꿈 잔치' 31일 개최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원 해외연수 성과 있어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인권 유린 풍조 사슬 끊어내길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강원도 벤처 신화 마중물 돼야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인구 2월에만 764명 순유출, 큰 위기 오나	2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지역 13면

내일 강릉시민축구단 홈개막전 '힘찬 출발'

오후 2시 강릉종합경기장 팡파르
하프타임·종료 후 다양한 이벤트

K3리그 소속 강릉시민축구단의 홈
개막전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강릉종합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강릉제일고
출신 김도근 감독이 이끄는 강릉시민
축구단은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2023년 상위권을 목표로 선수들과
함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개막전에는 권성동 국회의
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시장, 김
기영 시의장, 최종봉 강릉시민축구
단 후원회장, 권은동 도축구협회장
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
다. 또 경기 하프타임과 종료 후 시민
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등
이 마련됐다.

앞서 축구단은 지난주 K3리그 2라
운드에서 포천시민축구단과 경기
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김도근 감독은 "홈경기 승리를 위
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
고 있다"며 "구도 강릉의 자존심을 걸
고 축구는 강릉임을 증명해 보이겠
다"고 말했다.

이연제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3면

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 공모

무려 605건 접수 뜨거운 관심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슬로건 공모에 605건이 접수
되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올 6
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할 핵심 가치와 의정 활동 방침
을 설정하기 위해 '의정 슬로건 및 의
정 방침'을 공모한 결과 605건이 접
수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면밀한
심사를 위해 당선작 발표일을 다음
달 3일로 변경했다. 최우수작 입상자
는 의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 우수
작 입상자 2명은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100만원, 장려작 입상자 2명은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50만원이 수
여된다.

정윤희기자

2023년 03월 23일 (목)

강원

MBC 강원영동

특별자치도의회 의정 방침·슬로건 605건 접수

조규한

강원도의회가 6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을
공모한 결과 모두 605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응모작에 대해
도의회 내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상 여부와 수상 등급을 정하고,
다음 달 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우수 입상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
우수 입상자 2명과 장려 입상자 2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새 슬로건.의정 방침 공모 605건 접수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의정활동 방침을 설정하고자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을 공모한 결과 605건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는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당선작 발표일을 애초 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변경했다.

응모작은 도의회 내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상 여부와 수상 등급을 정한다.

최우수작 입상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상금 300만 원을, 우수작 입상자 2명과 장려작 입상자 2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과 5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권혁열 의장은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자치 발전을 꿈꾸는 도민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은 슬로건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자치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1면

강원특자도 특례 반영

지원위 준비 불만 폭발

김진태 지사 “기가 막힌다” 비판

정부 102개 조문중 70% 반대

특별법 개정 조기통과 절박 표현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놓고 정부 부처협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 향후 정부의 특례 반영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23일 오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김 지사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법안심사 대응 전략 회의를 가졌다. 전날 (22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엔 김명선 행정부지사과 각 실·국장, 부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30일 한덕수 총리가 도청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지원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의례적인 강원도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부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첫 회의

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조정실의 지원위 회의에 “기가 막힌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102개 조문 중 정부가 70% 정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지원위 회의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무성의를 놓고 김 지사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도지사 발언으로) 비전과 8대 전략, 행복강원도를 만들고 사통팔달 SOC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언급해달라고 써놨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첫 번째 회의는 몸풀기이고, 부처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틀 내에서, 잘 좀 도와달라고 하고 박수 치고 (회의를) 끝내면 (규제완화 등) 다 뒤집어 엮는 특별자치도법을 누가 해주겠느냐.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부처가 협조를 안 해줘서 힘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고착되면 안 되지만, 그건 (발언) 수위나 전략의 문제지,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강원도의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회의 직후, 강원도 특별자치국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이같은 우려를 전했고 국조실은 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렴,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가 다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원위 첫 회의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특례 반영 등 협조를 재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3면

정부, 타시·도 형평성 고려 '강원특자도 특례' 가시발길

전북·경기북부 특자도 후속 출범
한 총리 "전북특례 지원"발언 파장
4대 핵심규제 개선 부정적 입장
도, 공청회 요청 등 재설득 총력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가 2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도청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북의 특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개선안의 70% 정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22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전주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주를 찾아 "전북의 미래를 열기 위해 특례 정책 추진 등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강원도는 당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의 시너지 상승 등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정부 부처 고유 권한의 이

양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특례 반영이 이뤄질 경우엔 뒤이어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돼야해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다.

각 부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핵심인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강특별 개정안에 담긴 102개 조문(특별법 제정 당시 23개 조문, 부칙 등 제외)에 대한 부처 협의의 진행 결과, 정부는 조문의 70% 가까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은 26% 정도에 그치는 등 대다수 특례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의 독자적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경우에 발생하는 우려점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7개월 후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별자치도법 제정까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국면을 통해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의 관건인 4대 핵심규제 개선 등을 담은 특별법안 정부 협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잣대 등이 고려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교흥 소위원장에 1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를 재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부개정을 발의한 허영 의원과 도내 여야 의원들이 입법 설득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장이 군사, 농림수산위원회 여당간사인 이양수의원이 농수산림, 박정하 의원이 환경 부문을 전담하기로 했다.

도내 한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 등의 상황과 맞물려 (특례 반영이) 어려울 수 있고 있지만, 4월 입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3면

"특별법안 균형발전 역행 독소조항 삭제해야"

시민사회단체 성명 "수도권 제외를"

지방시대위 부총리급 기구 격상 요구

속보=정부가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하면서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특구 제도를 반영, 강원도 등 비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본지 3월 23일자 1면)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행정안전위원회가 당초 정부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던 것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 지역까지 신청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을 추가로 넣어 통과시켰다. 이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수도권을 꼭 제외시키는 수정안으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4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

강원도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을 개최, 강원도형 재정준칙 세부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박대출 국회의원,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재정의 건전운영 기반이 될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에 관

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차원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2월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하고 관련 근거 조문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포럼에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에 대해, 황규선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원도가 재정준칙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심해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적인 기준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2면

정부 문화격차 해소 전략에 강원권 국립문화시설 '1곳 뿐'

문광부 문화 거점도시 육성안
문화보존관 외 신규 건립 전무
국가시설 추가 유치 전략 필요

2027년 평창에 완공되는 국가문화보존관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새로운 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당초 계획된 국가문화보존관 외에는 신규

건립되는 주요 국가문화시설이 없어 강원권의 문화소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강원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의 지역특화 문화 거점도시 육성 계획을 밝혔다. 강원권의 경우 국가문화보존관을 중심으로 전통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전시, 관광 등 기록문화 거점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국가문화보존관

외에는 신규 건립되는 주요 국가문화시설도 없어 추가 유치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세워지는 주요 국립문화시설은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 △국립디자인박물관 (세종)이다.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도 세종으로 간다. 다른 주요 문화예술 시설 비수도권 건립 계획을 봐도 부산 (국제아트센터 클래식 전용 대공연장), 충남 아산 (이스포츠 상설 경기

장), 대전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전주 (서예비엔날레 전용관·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등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영남권은 대구 옛경북도청 (문화예술거점 조성), 충청권은 대전의 옛충남도청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부지가 문화클러스터로 선정돼 향후 현 강원도청 부지 활용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계획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관광체육시

설의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 공모사업 신청시 가점을 준다. 또 유류자산의 문화적 활용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속초 옛 대포정수장,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이 해당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문제부 관계자는 "강원지역 국립문화시설의 수가 다른 곳에 비해 적은 상황이지만 기존 문화도시, 인구소멸지역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화 격차를 좁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4면

시도교육감협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개정 촉구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등 건의

신경호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23일 전북대에서 제89회 총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동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 지난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은 38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413억

원을 냈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요구하고,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용도를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구 △교육비 지원 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전북대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했다.

기 조정 요청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90회 총회는 오는 5월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4면

강원도교육청 슬림화 '사업일몰제' 도입

5월 사업 전수조사 통폐합 결정

강원도교육청이 신경호 교육감 체제 2년차를 맞아 교육감 철학과 비전에 맞게 정책을 정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본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1700여 개를 전수조사해 중복 사업 등은 통·폐합 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유지하는 '사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사업, 특교사업, 공약사업, 국정과제, 교육부시책, 강원도시책, 자체사업 등 모든 사업을 들여다 본 뒤 신경호 교

육감의 철학과 비전에 맞는 사업 위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 슬림화의 연장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를 한번 돌아본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만, 새로운 정책 발굴 여지와 공간 확보의 취지도 크다"면서 "조직이 슬림화됐으니 업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사업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별 통·폐합, 유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오는 7월말에서 8월쯤 정책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1면

도내 공중보건의 절반 제대 ... 지역 보건소·응급실 파행 위기

취약지 의료공백 현실화

속보=강원도 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7명의 전역(분보) 지난 7일자 4면 보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도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는 26일 전역하는 공중보건의 77명은 도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사 163명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해당한다. 전역하는 공보의를 대체할 신규 공보의는 올 4월14일 이후에나 배치된다. 이 때문에 도내 각 보건·의료기관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등 임시방편 마련에 나섰다.

양구군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구성심병원은 26일 유일하게 내과 진료를 맡던 공보의가 전역하며 내과와 응급실 진료 기능을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병원 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임시 채용

했지만 내과 전문의 진료를 진행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천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홍천아산병원 역시 26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역, 4월 이후에는 당장 응급실 기능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천의 경우 공중보건의 19명 가운데 7명이 전역해 일부 보건지소는 1주일에 한 번 순회진료체제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창의 경

우 보건의료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전역하면서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과 소아과 예방접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동해시에서도 공보의 4명 중 3명이 전역하면서 보건진료소에 근무 중인 공보의가 보건소 순환진료를 하는 등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서화·정익기·조상원·장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사회 04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준비 박차

도교육청 사업 정비 나서

강원도교육청이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맞아 정책 정비에 나선다. 교육자치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및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을 중심으로 사업이 정비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3일 "1,700여개에 달하는 강원도교육청 사업을 살펴본 후 중복·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확대·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 정비는 매년 온라인

용역을 통해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및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에 발맞춰 한층 더 밀도있게 진행된다.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하나하나 사업의 성과 및 비전을 확인할 계획이며 1차 추경이 끝나는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일몰 사업 등을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틈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인원이 축소된만큼 사업 정비에 따른 업

무 조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경호 교육감은 '학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 본청 인원 50여명을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조직개편 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광윤 도교육청 정책관리담당관은 "교육청 내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1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24일 재개장한다. 개장을 하루 앞둔 23일 이순규 춘천레고랜드 사장과 함께하는 레고랜드 투어가 열렸다. 사진은 재개장을 앞둔 레고랜드 전경. 김정호

레고랜드 오늘 재개장... 의문·우려는 여전

**안전 강화 조치·지역채용 강조
방문객 수 외부 비공개는 유지**

레고랜드가 24일 재개장한다.

그러나 동절기 휴장 기간, 놀이기구 안전 감사를 세차례 실시하는 등 안전 부문을 강화했지만, 저조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생산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과 국내, 또 내부적으로 세차례 놀이기구 안전 감사를 실시했다"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놀이기구의 잦은 멈춤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레고랜드의 안전 강화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입장객 미발표와 저조한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순규 대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00명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최대 650명 정도"라며 "현장 근무자는 도내에서 80~90%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 수는 열린사에서 글로벌 정책으로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 글로벌 정책으로 저희가 행동하기 어렵다"며 "다만 본사와 협의하고 동시에 강원도, 춘천시와 협조해서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해 5월 레고랜드 개장 당시 연간 방문자 200만명, 고용창출 8000명으로 예상했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2일 성명에서 "레고랜드는 1년이 지나도 지역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방문객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가 방문객 수 공개 등 조치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협력과 지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동절기 휴장을 마친 레고랜드는 시즌 패스 도입·야간개장·어린이 물놀이장·계절별 프로그램을 갖추고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김덕형 > 관련기사 11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지역 11면

레고랜드 연계 관광산업 궤도 수정 불가피

**레고랜드 효과 저조 연쇄 파장
먹거리 종합공간 사업성 우려
삼천동 선박 활용 상품 물거품
“전체여건 살펴 계획 짚어야”**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 1년을 앞둔 가운데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레고랜드 붐 조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춘천시 관광·지역연계 산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가시화되던 민선7기부터 근화동·삼천동 일원에 역점 사업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이용객

을 도심과 외곽지역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이후 1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보다 밀들면서 춘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화동, 2571)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고 이를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민선7기 춘천시는 춘천대교 옆에 ‘화동, 2571’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는 80% 정도 완료했으며 오는 6월 준공이 목표다. 국비 40억원·시비 85억원 등 125억원을 투입한 이곳은 먹거리연구지원센터와 우리술체험관, 시민문

화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사업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장 위탁을 맡겼다는 곳이 없어 춘천시는 재공고를 내야 했다.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지원, 민간위탁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화동, 2571’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춘천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입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소양강치녀상에서 유턴을 해야 진입할 수 있는 데다 인근 번개시장과 중앙시장과의 상생 여부도 불투명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레고랜드 개장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아 ‘화동, 2571’ 개장을 앞두고 시에서도 여

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삼천동 일원에서 배를 타고 레고랜드에 진입, 또 다른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입장객 저조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지 오래다. 이밖에도 전액 민자사업으로 춘천대교 인근에 조성하려던 대관람차 역시 토지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화동 일원의 관광개발계획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윤민섭 시의원은 “레고랜드 개장 효과가 기대만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며 “레고랜드만 볼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여건을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고 말했다. 오세현



2023년 03월 23일 (목)
강원

레고랜드 활성화 박차...과제도 여전



[앵커]

KBS가 춘천 레고랜드테마파크 재개장을 맞아 준비한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드디어, 내일(24일) 레고랜드가 재개장을 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뭐가 달라지는지, 남은 숙제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놀이동산입니다.

지난해 첫 개장 당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부대시설 운영이 서툴다, 이런저런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다음 달(4월)부터 야간개장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9시까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야간 개장은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가운데 춘천이 처음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도 대비합니다.

물놀이장 5개를 설치합니다.

다양한 소품과 행사를 준비해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뛰놀며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레고랜드는 야외시설이 많다 보니 여름철 뽕박벌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곳곳에 이런 대형 그늘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입장권은 봄, 여름, 가을로 세분화됩니다.

맘에 드는 계절을 골라,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 기간엔 자유로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에는 어린이용 메뉴와 한식이 추가됐고, 춘천역과 테마파크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이순규/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사장 : "즐길거리, 볼거리, 잘거리. 이런 3가지의 테마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간 저희는 꾸준히 그런 3가지 테마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과제도 여전합니다.

입장객 수와 지역 주민 고용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역의 경제 정책 수립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그런 수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선 레고랜드에 8천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놀이동산이 겨울철마다 문을 닫는 것도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레고랜드 재개장.. '기대반 우려반'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앵커]

레고랜드가 3개월 간의 겨울 휴장을 마치고 다시 개장합니다.

지난해 처음 개장한 레고랜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레고랜드 측은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관리 보수 등을 이유로 겨울 휴장에 들어갔던 레고랜드가 다시 문을 엽니다.

휴장 동안 시설을 개선한 레고랜드는 전 세계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하고.

여름철엔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이번에 이런 야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지역) 할인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레고랜드가 운영되면 연간 방문객 200만 명, 고용 창출 8천여 명 등을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장 이후 비싼 주차비용과 부족한 놀이시설 등으로 시끄러웠고,

지역 인재 채용도 저조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최근에는 입장객 수를 두고 지역사회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인터뷰]

"가장 원초적인 자료인 방문객 수조차 공개하지 않고, 고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강원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레고랜드는 방문객의 경우 멀린사의 글로벌 정책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덴마크처럼 지자체와 함께 관광 상품을 기획하거나, 미국처럼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지역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대한 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고, 저희가 좋은 이웃으로 오랫동안 춘천시민, 강원도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하는 레고랜드가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2면

도, 정부에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요청

강원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 협조에 나섰다.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은 2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부처 실무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면담을 갖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광열 부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원주가 포함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소모품실증센터와 신뢰성검증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주를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감하며 추후 클러스터 확장 시 원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또, 센터 설립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용 도 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실증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반영과,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했다. 장관께서는 '큰 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덕형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강원도 '비상'



[앵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서 소외된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23일),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에 이어 조만간 삼성전자와도 접촉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급하게 산업통상부장관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용인에 조성하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해 달라는 겁니다.

[정광열/강원도경제부지사 : "이천과 아주 가운 원주까지 확장하는 게 산업적인 측면이나 국가 전략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산자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기현/국회의원 : "강원도도 원주시도 먼저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산자부 장관 역시 강원도의 요청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삼성전자와도 면담을 갖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원주의 반도체 기반은 이제야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

반도체 산업기반을 만들려면 필수적인 용수공급에 6,000억 원, 전기기반시설에 5,000억 원이 들 정도로 막대한 돈이 듭니다.

수질오염, 환경 등 엄한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법안 특례로 풀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현/원주시의원 : "용수문제나 부지문제. 뭐 환경문제 전력확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지금 원주시는. 과연 이게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염려들이..."]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확장의 여부가 강원도의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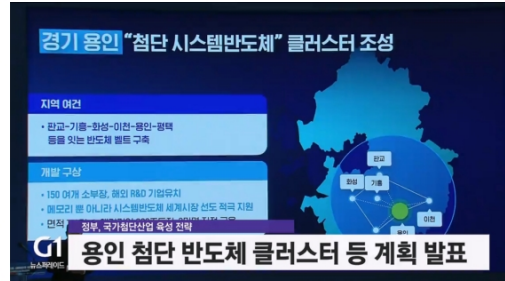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임서영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포함 '사활'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앵커]

정부가 최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대상지로 용인을 선택하면서,

강원도와 원주시가 추진하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주시가 정부와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용인에 3백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주요 전략중 하나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던 강원도와 원주시가 급해졌습니다.

◀브릿지▶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 정부 발표를 악재가 아닌 기회로 삼고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정부 계획에 원주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부족한 산업단지로 진단했습니다.

또 수질오염 총량제 한강단위 유역에 포함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산단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이런 약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맨날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커피 팔아서 살아야 된다 회 팔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린 그럴거예요, 언제까지 치약산만 가지고.."

원주시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용인 중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 원주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설득할 무기는, 최근 원주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것과,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서 빠진 상태라 돌파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클러스터로 변경했습니다. 3월 15일 정부 발표에서 원주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당 의원들도 시대의 사기극이 되면 안 된다는 염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용인 중심의 클러스터에 원주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종합 02면

오색케이블카 후속 행정절차 속도낸다

양양군 투자사업 심사서 道에 제출... 연내 착공 청신호

속보=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한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본보 지난 6일자 12면 등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요한 행정절차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최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남은 11개의 행정절차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최종 심사는 강원도로부터 심사서를 넘겨받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1,000억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확한 사업비 규모는 올 10월께 완료될 예정인 본설계 결과에 따라 산정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및 환경부와 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동부지방산림청과의 산지 일시사용 협의, 산림청 및 양양

국유림관리소와의 국유림사용허가 협의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건축허가·구거점용·농지전용 절차는 양양군의 담당 사항이며, 지방건설기술 심의는 강원도의 권한이다.

양양군은 행정절차를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끝내고 11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사가 착수하면 2026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상업운행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양=이규호기자 hokuy1@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지역 18면

고성서 '연어의 꿈 잔치' 31일 개최

본지·동해생명자원센터 공동

어린연어 50만 마리 방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된 '연어의 꿈 잔치' 행사가 오는 31일 오전 11시 고성 북천강 연어맞이광장에서 열린다.

강원도민일보와 한국수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고성군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연어사리무사회귀및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캘리그래피아트스탠딩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식전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연어의 꿈 잔치'는 지난 1996년 첫방류를 시작으로 2001년 남북공동 연어방류가 이뤄진 상징성을 보유한 역사적인 행사로 세계유일의 분단군인 고성군에서 개최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연어사리(어린 연어) 50만 마리 방류를 통해 자유와 평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할 예정이다. 지산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사설/칼럼 19면

의원 해외연수 성과 있어야

-의정·지역 발전 연결할 내실 있는 일정 필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완화하면서 도와 시군의 해외연수와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해외 방문이 제한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해 왔던 의원들이, 식견을 넓히고 다양한 문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여야로 갈려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던 의원들이 함께 생활하며 협치와 화합을 다짐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장이 여행 일변도의 일정이 되면 곤란합니다. 출장과 연수를 수준 높은 의정 활동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연수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15개 시군의 의회의 의장들은 최근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고성군의회와 속초시의회는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의회도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회기가 끝난 강원도의회도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동유럽, 호주 등지를 찾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오스트리아와 체코, 네덜란드, 독일, 호주를 방문합니다. 의원

들은 주요 명소와 기관을 둘러보며 정책 사례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지 스포츠 구단을 탐방해 수익 창출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한 관광 정책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과 다문화·돌봄 정책도 살펴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집행부의 정책에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배정과 조례 제정 등 입법 과정에서 우수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한 급지 않은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소를 방문하는 것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이지만,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계획과 추후 리포트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연수를 다녀오는 만큼, 현지 실태를 전하고 의정에 접목할 부분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출장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건강한 의정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눈치 보듯 조용히 다녀오는 연수 풍토 대신, 당당하고 내용 있는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4일 (금)
사설/칼럼 19면

인권 유린 풍조 사슬 끊어내길

-여성 결정권 등 지위 낮은 강원도내 지자체 앞장서야

강원경찰청 범죄수사대는 평창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마을의 피의자 여러 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주민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여부를 파헤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 40대 부모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었다가 금세 식고 마는 현상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제 (3월 23일) 발표한 21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에서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에 달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2014년 35.9%에서 2021년 60.9%로 뛰어올랐습니다.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 등 대다수 면식범이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 기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671명의 판

결문을 기초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3503명 중 여성이 91.2%로 절대적이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대다수 범죄자는 남성 성인이며,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도 14.1%여서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첨단 기기 발달로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이 점점 더 악랄하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채팅앱 등 인터넷 통로로 알게 된 사람의 성매수 범죄 비중도 높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강원도 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647건으로 2018년에 비해 57%p 급증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인권 유린 범죄가 감소될 기미가 적다는 점에서 사회에 만연한 인권 경시 풍조와 성범죄에 대한 낮은 경각심을 탓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여성의 정책 결정권 등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곳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인권 존중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발달해야 개인의 범죄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사설/칼럼 25면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강원도 벤처 신화 마중물 돼야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에 나선다. 창업을 원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다. 총 규모 100억원으로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며 도내에 주소를 둔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청년창업자 200명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다. 4월 초부터 청년창업자가 강원신보에 서류 접수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되고 도경제진흥원이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 사업을 민선 8기 새로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취업 쿠폰 확대, 도 청년센터 설치, 청년포털 구축, 강원 맞춤형 청년통계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및 아이디어에 기반한 소자본 청년창업 지원 확대로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청년 정책은 강원도 백년대계의 첫 단추다. 청년이 없으면 인구가 없고 인구가 없으면 지역은 소멸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위기

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단하고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원도가 많은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올 해만큼 절실한 때가 없었다. 청년창업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한 강원도가 된다면 기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다. 물론 청년창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금은 늘 부족하고 사업이 실패할 위험도 높다.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어 전력 질주하도록 넓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발목을 잡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일자리 정책의 중심인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강원도에서 창업하고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원도가 김 지사의 약속처럼 청년창업을 하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모델을 구현해내길 기대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이 강원도를 무대로 원 없는 날갯짓을 해 나가길 적극 응원한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4일 (금)

사설/칼럼 25면

道 인구 2월에만 764명 순유출, 큰 위기 오나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내인구 이동 및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총 전입인구는 1만7,341명, 총 전출인구는 1만8,105명을 각각 기록, 764명 순유출을 나타냈다. 대학 대면수업 재개에 따라 수도권으로 이동한 도내 20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내 인구이동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입자가 더 많은 순유입 상태였지만 올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순유출로 전환됐다. 강원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보다 큰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을 인구 증대 관점에서 설계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대학 대면수업 재개 영향 큰 듯

인구 문제, 고령화와 연동 종합적 대책 마련을
노동·교육·복지 등 정책의 근간 새롭게 해야

부터라도 도내 인구 순유출 및 고령화가 초래할 파장들에 미리 대비할수록 미래의 강원도가 부담할 비용은 줄어든다. 반대로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고령화의 거대한 파장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구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강원도는 그러한 미래 대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 연장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 정도로의 인식에 머물러서

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요구된다. 이는 지금의 입시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강원도는 이제 ‘고용도 연장하고, 청년실업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대책이 아닌 노인이 늘고 청년이 줄어드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설계도의 방안을 치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 강원도는 경쟁력 자체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기에 인구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연동돼 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이가 노인이 되며,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젊은 세대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은 약해지고,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며, 격차와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는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요구된다. 이는 지금의 입시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강원도는 이제 ‘고용도 연장하고, 청년실업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대책이 아닌 노인이 늘고 청년이 줄어드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설계도의 방안을 치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